전북도 상용차산업 생태계 구축한다

과기부 기술성평가 관문 통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발판 마련 기대

전북도는 지난 21일 2018년 4/4분기 부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8개 부처 41개사업)에 대한 기술성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전북도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과학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인정받아 기술성평가 최종 통과되었고 밝혔다.

이번 기술성평가 통과는 송하진 도지사의 산업부 장관 면담(11월 14일)을 통한 협조요청, 도내 김관영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 산업부 예타대상 22개 사업 중 5순위 확보, 과기부 기술성평가 대응을 위한 기획보고서 고도화 및 국가균형위원회 입지적정성 확보 등 체계적이고 발빠른 대응의 결과이다.

그동안 전북도에서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예타 신청을 위한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재점검하고, 기획보고서 고도화를 위해 (재)자동차융합기술원과 함께 휴일도 반납해가며 과기부 기술성평가 항목별 자료 준비, 사전 검증을 실시했고, 또한 입지적정성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입지적정성을 검토의뢰(10월 23일)해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역낙후도 및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정성 확보,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지역정책과의 정합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회신(11월 8일)받았으며, 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 예비검토(11월 19일), 기술위원회 사업설명(11월 27일)을 통해 최종 기술성평가에서 통과(12월 21일)됐다.

기술성평가 통과의 의미는 과기정통부 기술성평가 통과률이 25% 이하인 상황에서 우리 도의 강점인 상용차 부품산업의 고도화와 선제적 시장확보 기술개발의 국고지원을 통한 정부주도의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이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빠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1,930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스마트화 상용차 점프-업 융복합 기술개발, 시험·실증 연구기반 구축과 부품생산 집적지 육성 등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 4,866개 창출, 자동차·부품 생산유발 8,446억원 이상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술성평가 통과로 지역 부품업체에서는 미래형, 친환경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점프-업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Co-LAB센터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부품에 대한 패스트 실증, 조기사업화 가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을 통한 기업유치 및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어 전북에 명실상부한 상용차의 미래형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과기부의 기술성평가 통과는 예타통과 9부 능선을 넘은 것"이라며 "그동안 산업부 선순위 확보와 과기부 기술성평가에 힘을 실어준 산업부 자동차항공과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고마움을 전달한다"면서 "앞으로 남아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적극 대응하여 군산발 경제한파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5월 예타 통과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홍영표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매우 유감"

'패스트트랙' 처리 가능성 시사…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합의가 불발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을 통한 처리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는 데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민생입법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특히 어제 유치원 3법을 논의한 교육위 법안소위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을 문제 삼아 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며 "유치원 3법을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퇴장이라 생각한다. 매우 유감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한국당이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 신청을 하면서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꼬투리 잡아 심사를 거부한 것은 유치원 3법을 할 의사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만 동의하면 교육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김종천 전 靑비서관 음주운전 혐의 시인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 경 술을 마신 뒤 청와대 비서실 소속 차량으로 약 100m를 운전하다가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였다. 그는 지난 1일 경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혐의를 전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탔던 동승자 두명은 의전비서관실 직원들로 김 전 비서관이 회식을 마친 후 관사로 데려다주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장소를 잘 찾지 못하는 기사를 만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20일과 21일 양일 간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호남권 컨소시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대학들 5년 성과 공유

전북대 등 5개 컨소시엄 대학 호남권 성과 보고회 개최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은 20일과 21일 양일 간 부여롯데리조트에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호남권(전북대) 컨소시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업 선도대학인 전북대와 협력대학인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의 사업추진위원, 실무담당자 및 프로그램 운용 교수 등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년간의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대 등 5개 컨소시엄 대학들은 지난 5년 간 전북도와 연계한 해외 유학생 유치와 공동 유학박람회 및 입학설명회, 전북지역 공동 한국어 교재 활용, 전북지역특화 농생명 교육, 해외 거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유학생 유치 및 지원 사업을 통해 2014년 1차 년도에 775명에 머물렀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올해 1,62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고, 5년 간 5개 대학의 유학생 중도탈락률도 2014년 4.3%에서 2018년 0.9%로 대폭 감소했다.

이날 참여 대학들은 각 대학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추진 관련 부족한 점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발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그간 구축해 온 네크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해외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공동으로 유치하고, 지자체 및 지역 기업체의 공동 현장실습 및 협력 등을 강화키로 했다.

윤명숙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위원장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원을 위한 우리의 역동적인 활동들이 나름의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아 기쁘다"며 "지역대학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해 이러한 성과가 더 큰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민주당 "나경원, 카풀법 통과시켜놓고… 택시노동자 우롱"

더불어민주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전날 택시업계 대규모 집회에서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정부 투쟁 운운한 것에 대해 '포퓰리즘 정치의 정수'라고 비난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첫 장외 일정에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봉합돼가던 갈등을 다시 증폭시키고 분열을 조장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까지 막아서면서 눈앞의 인기를 좇는 작태는 '포퓰리즘 정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공정위, 불공정 대리점거래 유형 13개 구체화 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은 유형고시 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대리점법은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 ▲주문내용 확인 거부 및 회피 ▲보복조치 등 7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행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불공정거래 유형 13가지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입강제 유형에서 '주문자체가 없는 상품·용역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행위'가 추가됐고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용역을 묶음으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이익제공 강요 유형에선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판촉행사라도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대리점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라도 본사가 부담할 비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대리점에 부담시키는 행위' 등이 추가됐다. 판매목표 강제 유형에선 '상품·용역의 공급을 지연하거나 축소하는 행위', '결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이 추가됐고 불이익제공 유형에선 '계약기간 중에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등 5가지가 추가 규정됐다. 그밖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인테리어 시공 등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도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경영간섭행위 유형으로 추가됐다.

/뉴시스